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27
2015. 4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5.3.1~3.31)

건축문화 부문

- 국토부,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 국토부,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 경기도, '2015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부산시, '2015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전남도,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 서울시, '서울지도 홈페이지' 개편
- 경기도,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의정부 제일시장' 선정
- 대전시, '2015년도 도시재생 시민대학' 강좌 개설 · 운영
- 대전시, '도시재생 심포지' 개최
- 서울시, 'BBP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서울시, '일상이 되는 한옥실현을 위한 한옥정책' 개최
- 부산시, '2015 도시건축시민투어' 실시
- 서울시, '제4회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시상식 및 세미나 개최

녹색 건축 · 도시 부문

-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환경부, '2015년 자연마당' 사업지로 광주 등 4곳 추가 선정
- 울산시,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 서울시,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 확대 추진
- 충남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울산시,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국토부,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을 위한 공모 착수
- 서울시,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 발표
- 울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공포
- 인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계획' 발표
-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경기도,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 부산시, 올해 첫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완공
- 국토부 · 산통부, '2015년도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선정' 공동 추진
- 농식품부, '농촌형 적정주택 표준설계도' 26종 개발 · 보급
-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 울산시,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부산시,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 대구시,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추진
- 부산시, 2015년 노후간판 교체 사업 실시
-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 및 신축비용 용자지원범위 확대
- 울산시, 2015년 도시계획정보체계(UPIIS) 지속 구축
- 인천시,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공모
- 전남도, 행자부 평가 '2014년 옥외광고업무 추진 우수기관' 선정
- 전북도, 「주택 · 경관분야」 국비 39억 원 확보
- 전북도, '2015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본격 추진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5년 4월호 (통권 27호)

-
-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5. 4. 30
 - 발행인 : 제해성
 - ISSN : 2288-274X
 - 편집 · 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 획 : 건축 · 도시정책정보센터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 연락처 : 031-478-9845
 - 이메일 : kslee@auri.re.kr(0|경신)
-

contents

vol.27_2015. 04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 5 이달의 정책 Highlights
- 6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건축문화 부문

- 8 국토부,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 8 국토부,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 8 경기도, '2015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9 부산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9 전남도,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 10 서울시, '서울지도 홈페이지' 개편
- 10 경기도,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의정부 제일시장' 선정
- 11 대전시, '2015년도 도시재생 시민대학' 강좌 개설·운영
- 11 대전시, '도시재생 심포지엄' 개최
- 11 서울시, 'BBP 국제 컨퍼런스' 개최
- 11 서울시, '일상이 되는 한옥실현을 위한 한옥정책' 개최
- 11 부산시, '2015 도시건축시민투어' 실시
- 11 서울시, '제4회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시상식 및 세미나 개최

녹색건축·도시 부문

- 12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12 환경부, '2015년 자연마당' 사업지로 광주 등 4곳 추가 선정
- 12 울산시,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 13 서울시,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 확대 추진
- 13 충남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확대 추진
- 14 울산시,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15 국토부,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을 위한 공모 착수
- 15 서울시,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 발표
- 16 울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공포
- 17 인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계획 발표
- 17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17 경기도,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 18 부산시, 올해 첫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완공
- 18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1권' 발간·배포
- 19 국토부·산통부, '2015년도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선정' 공동 추진
- 20 농식품부, '농촌형 적정주택 표준설계도' 26종 개발·보급
- 20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 20 대구시, 2015년도 5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contents

vol.27_2015. 04

- 21 세종시,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 21 충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21 울산시,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22 부산시,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 22 대구시,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추진
- 23 부산시, 2015년 노후간판 교체 사업 실시
- 23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범위 확대
- 24 울산시, 2015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지속 구축
- 24 인천시,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공모
- 25 전남도, 행자부 평가 '2014년 옥외광고업무 추진 우수기관' 선정
- 25 전북도, 「주택·경관분야」 국비 39억 원 확보
- 26 전북도, '2015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본격 추진

이달의 정책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이달의 건축문화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한옥 등 건축·도시와 관련한 여러 공모전의 시작을 알리는 홍보자료 및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착수에 따른 지자체 도시재생관련 행사소식이 중점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2015년도 추진 공모전으로 '2015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및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소식을 알렸고, 지자체에서는 부산과 경기도에서 '2015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2015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소식을 알렸다.

지자체 도시재생 관련 행사소식으로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도시재생심포지엄'과 '2015년도 도시재생 시민대학 강좌' 소식이 있었다.

이밖에 기타 건축문화 소식으로 서울시에서는 'BBP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알렸고, 부산시에서는 '2015년도 도시건축시민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는 관련법률 개정소식과 이달에 추가 확대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소식이 중점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에서는 국토부가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절차 단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고, 환경부는 '2015년 자연마당 조성사업'의 사업지로 4곳을 추가 선정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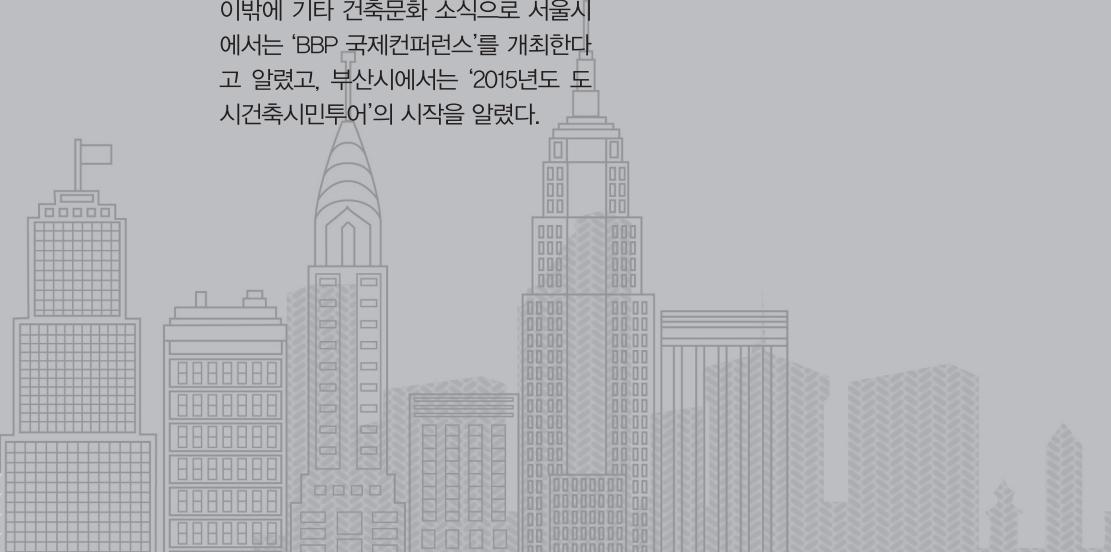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와 충청남도가 각각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대한 확대 추진 계획을 알렸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셀트드와 도시재생과 관련한 소식이 중점적이었다.

국토부가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경기도와 부산시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국토부가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 공모' 착수 소식을 알렸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했고, 인천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으며, 울산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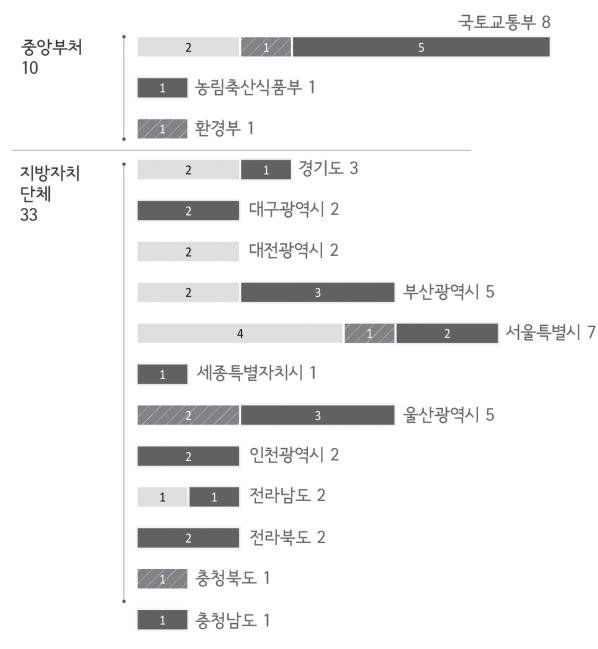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2015년 3월 한 달 동안 수집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도시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는 총 43건이다.

이 중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10건(23.3%)의 보도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8건(18.6%)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이고 나머지 2(4.7%)건은 농림부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로 각각 1(2.3%)건의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강원, 광주, 경남, 경북,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3건(76.7%)의 보도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서울시가 7건(16.3%), 부산시와 울산시가 각각 5건(11.6%)의 정책사업을 발표해 타 지역에 비해 서울과 부산, 울산지역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사업 대한 진행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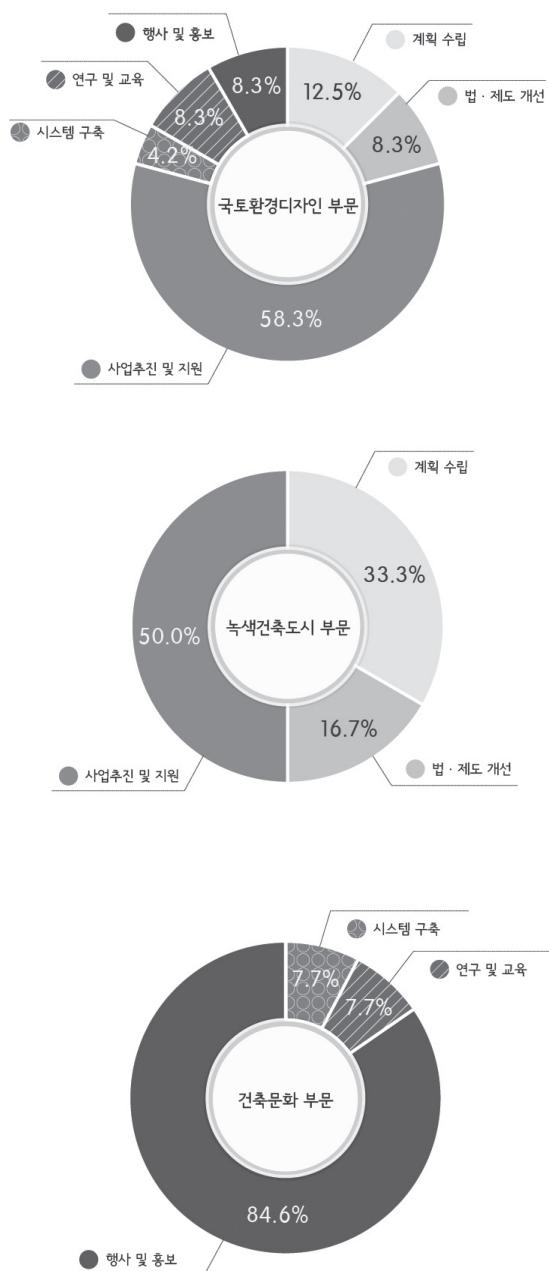
● 건축문화 부문 ● 녹색건축도시 부문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부문별로는 전체 43건 중 24건(55.8%)이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 해당하는 보도자료로, 중앙부처인 국토부에서 5건(11.65%), 농림부에서 1건(2.3%)의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나머지 18건(41.9%)은 지자체 10곳에서 발표한 자료로 부산과 울산·경기도에서 각각 3건(7.0%), 전북·서울·대구·인천에서 각각 2건(4.7%), 충북·전남·세종에서 각각 1건(2.3%)의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이밖에 ‘건축문화’ 부문과 ‘녹색건축도시’ 부문의 보도자료는 각각 13건(30.2%), 6건(14.0%)으로 정리된다.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 부문	국토환경 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2(4.7%)	1(2.3%)	5(11.6%)
	농림축산식품부	–	–	1(2.3%)
	환경부	–	1(2.3%)	–
합계 (중앙부처)	2(4.7%)	2(4.7%)	6(14.0%)	10(23.3%)
경기도	2(4.7%)	–	1(2.3%)	3(7.0%)
대구광역시	–	–	2(4.7%)	2(4.7%)
대전광역시	2(4.7%)	–	–	2(4.7%)
부산광역시	2(4.7%)	–	3(7.0%)	5(11.6%)
서울특별시	4(9.3%)	1(2.3%)	2(4.7%)	7(16.3%)
세종특별자치시	–	–	1(2.3%)	1(2.3%)
울산광역시	–	2(4.7%)	3(7.0%)	5(11.6%)
인천광역시	–	–	2(4.7%)	2(4.7%)
전라남도	1(2.3%)	–	1(2.3%)	2(4.7%)
전라북도	–	–	2(4.7%)	2(4.7%)
충청남도	–	1(2.3%)	–	1(2.3%)
충청북도	–	–	1(2.3%)	1(2.3%)
합계 (지방자치단체)	11(25.6%)	4(9.3%)	18(41.9%)	33(76.7%)
총 계	13(30.2%)	6(14.0%)	24(55.8%)	43(100.0%)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분야별로 보도자료 43건 중 20건(46.5%)이 ‘사업추진 및 지원’과 관련한 보도자료였으며, 10건(23.3%)은 ‘행사 및 홍보’와 관련한 보도자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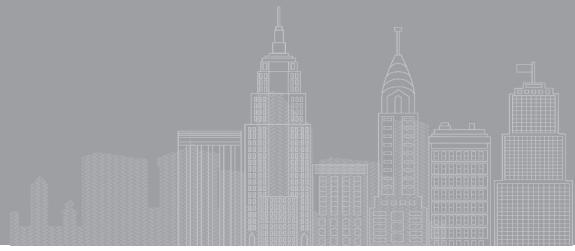
나머지 13건의 보도자료 중 5건(11.6%)은 ‘계획수립’과 관련한 보도자료였으며, ‘법·제도 개선’ 및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한 보도자료는 각각 3건(7.0%)씩이었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보도자료는 2건(4.7%)에 그쳤다.

「건축문화 부문」에 해당하는 보도자료 중에서는 ‘행사 및 홍보’ 관련 자료가 8건(18.6%), 「녹색건축도시」에 해당하는 보도자료 중에서는 ‘사업 추진 및 지원’ 관련 보도자료가 3건(7.0%), 「국토환경 디자인」 부문 역시 ‘사업추진 및 지원’ 관련 보도자료가 14건(32.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부문	녹색건축도시부문	국토환경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2(4.7%)	3(7.0%)	5(11.6%)
법·제도 개선	-	1(2.3%)	2(4.7%)	3(7.0%)
사업추진 및 지원	3(7.0%)	3(7.0%)	14(32.6%)	20(46.5%)
시스템 구축	1(2.3%)	-	1(2.3%)	2(4.7%)
연구 및 교육	1(2.3%)	-	2(4.7%)	3(7.0%)
행사 및 홍보	8(18.6%)	-	2(4.7%)	10(23.3%)
총 합계	13(30.2%)	6(14.0%)	24(55.8%)	43(100.0%)

■ 세부분야별 정책동향

건축문화 부문



국토부,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총상금 4,300만원, 7.27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한옥센터가 주관하는 「2015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올 7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상 그 이상의 한옥’이라는 주제로 한옥 준공, 계획 및 사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7월 27일부터 3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고 9월에 최종 당선작 선정·발표 예정이다.



■ 2014 준공부문 한옥대상「한경현」 ■ 2014 사진부문 대상 「자연과의 균형」



2015.03.22.

국토부,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국민참여를 통한 지역 맞춤형 행복주택 사업 발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하는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이 3월 11일 실시된다.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 및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함이며,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가능하고, 개발구상의 제안수준에 따라 일반제안과 전문제안으로 구분하여 응모가 가능하다.

당선작은 일반제안과 전문제안 각각 11건 내외로 선정하여 7월 1일에 확정 발표하며, 당선작은 지역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실제사업으로 연계 추진될 계획이다.



2015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행복주택		
• 제작 주체: 국토부 기관을 운영·지원하는 국립공원청·문화재청·한국토지주택공사·시내수사업 등 정부기관은 물론 민관 협력으로 운영되는 주관입니다.	• 대상	• 시상
• 행정부처: 건설교통부(한국도시기획院·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부)·국립공원청·문화재청·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기관은 물론 민관 협력으로 운영되는 주관입니다.	• 제작 주제: 주거·문화·환경·미래 등 주제별로 제작·제출하는 제작 주제로 5개 주제로 나눠 참여가능	• 당선작은 일반제안과 전문제안 각각 11건 내외로 선정하여 7월 1일에 확정 발표합니다.
• 접수 주제: 주거제안: 50㎡ 이하 주거 면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혁신화하는 제작 주제로 5개 주제로 나눠 참여가능	• 제작 주제: 주거제안은 전시·전시·전시·전시·전시 등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당선작은 일반제안과 전문제안 각각 11건 내외로 선정하여 7월 1일에 확정 발표합니다.
•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당선작은 일반제안과 전문제안 각각 11건 내외로 선정하여 7월 1일에 확정 발표합니다.

2015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 접수 주제: 주거제안: 50㎡ 이하 주거 면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혁신화하는 제작 주제로 5개 주제로 나눠 참여가능	• 대상	• 당선작 발표: 2015. 7. 1.(수) · 최종상: 2015. 7. 8.(수)
•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제작 주제: 주거제안은 전시·전시·전시·전시·전시 등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당선작은 일반제안과 전문제안 각각 11건 내외로 선정하여 7월 1일에 확정 발표합니다.
• 접수 주제: 주거제안은 전시·전시·전시·전시·전시 등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제작 주제: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당선작은 일반제안과 전문제안 각각 11건 내외로 선정하여 7월 1일에 확정 발표합니다.
• 접수 주제: 주거제안은 전시·전시·전시·전시·전시 등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제작 주제: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당선작은 일반제안과 전문제안 각각 11건 내외로 선정하여 7월 1일에 확정 발표합니다.

2015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 접수 주제: 주거제안: 50㎡ 이하 주거 면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혁신화하는 제작 주제로 5개 주제로 나눠 참여가능	• 대상	• 당선작 발표: 2015. 7. 1.(수) · 최종상: 2015. 7. 8.(수)
•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제작 주제: 주거제안은 전시·전시·전시·전시·전시 등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당선작은 일반제안과 전문제안 각각 11건 내외로 선정하여 7월 1일에 확정 발표합니다.
• 접수 주제: 주거제안은 전시·전시·전시·전시·전시 등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제작 주제: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당선작은 일반제안과 전문제안 각각 11건 내외로 선정하여 7월 1일에 확정 발표합니다.
• 접수 주제: 주거제안은 전시·전시·전시·전시·전시 등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제작 주제: 주제별로 제작·제출 가능	• 당선작은 일반제안과 전문제안 각각 11건 내외로 선정하여 7월 1일에 확정 발표합니다.

■ 2015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포스터



2015.03.10.

경기도, '2015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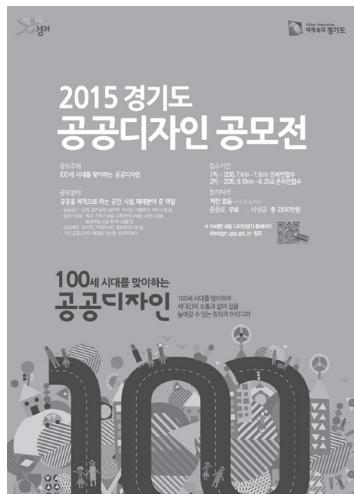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경기도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우리사회의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디자인의 역할을 찾기 위해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디자인」을 주제로 「2015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디자인분야 학생 및 전문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매체(시각)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공공간디자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7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작품 접수를 받는다.



■ 2015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포스터

2015.03.23.

부산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기찻길 옆 마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디자인 발굴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과

부산광역시는 창의적 유형의 우수한 공공디자인 발굴 및 공공디자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을 위해 기찻길 옆 마

을을 대상으로 한 「2015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공모전은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작품 접수를 받는다.



■ 2015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포스터

2015.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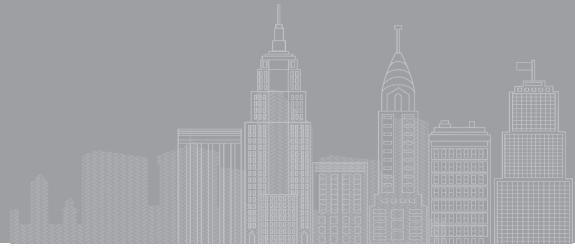
전남도,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전라남도 주택건축과

전라남도는 전통 한옥의 멋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미래 한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4일간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인근 목재문화체험장 일원에서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박람회는 신(新)한옥 주거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한옥 거주 희망자에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옥

건축문화 부문



건축 산업계에 한옥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통로를 마련을 위해 ‘한옥, 그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며, 한옥의 멋과 우수성을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세미나, 전국 한옥기능 경기대회, 각종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2015.03.23

서울시, ‘서울지도 홈페이지’ 개편 화장실·장애인 편의시설·여성 일자리 제공·외국어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공간정보 서비스 개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담당관

서울시는 ‘서울지도(www.gis.seoul.go.kr)홈페이지’를 서울시의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3월 18일(수)부터 개시하며, 민간 지도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복지, 여성, 장애, 외국인 등 맞춤정보 제공한다.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경험을 바탕으로 한 메뉴체계와 누구나 쉽게 가독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지도 홈페이지’를 수치지도 기반 지도에서 민간포털지도를 이용한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지도의 최신성과 정확성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텐츠 재구성을 통한
메뉴 전면 개편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구성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지도관련 서비스연계킬리 컨텐츠 전면 배치
및 노출 강화이해하기 쉬운 심볼 및
디자인 적용

■ 개편된 서울지도 홈페이지 화면

2015.03.17.

경기도,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의정부 제일시장’ 선정

경기도 사회경제과

경기도는 3월 2일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내 복합문화공간인 ‘열린문화공간’을 의정부 제일시장에 조성한다.

‘열린문화공간’은 지역주민 및 고객에게 열린도서관, 카페 등 휴식공간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소비계층을 시장으로 모이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03.03.



대전시, '2015년도 도시재생 시민대학' 강좌 개설·운영

시민인식 개선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대전시 도시재생본부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효과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시민대학' 강좌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물리적 사업에 치중했던 쇠퇴 도시에 대한 정책에서 주민 중심의 종합적인 도시재생 정책 패러다임에 맞춰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대전시민대학에서 2,3,4 학기에 총 3기로 나누어 주1회 2시간씩 5주간 총 10 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강좌내용은 ▲1주차 도시재생의 개념 및 현황 ▲2주차 공동체 주거건설과 빈집재생 ▲3주차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 ▲4주차 대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5주차 대전시 도시재생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70% 이상인 수강생은 수료증을 받게 되며 대전시 산하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상시학습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기타 건축문화 소식

2015.3.31.

도시재생사업 전략 수립과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심포지엄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
(주최)한국도시계획과학회, 대전발전연구원

2015.3.12. ~ 3.15.

BBP 국제 컨퍼런스

서울시청 (다목적홀, 시민청), 세운상가군 일대
(주최)국제도시계획가협회(SOCARP)

2015.3.21.

서울시, "일상이 되는 한옥실현을 위한 한옥정책"
가회동 백인제가옥
(주최)서울시

2015. 3. 25 ~ 3. 31(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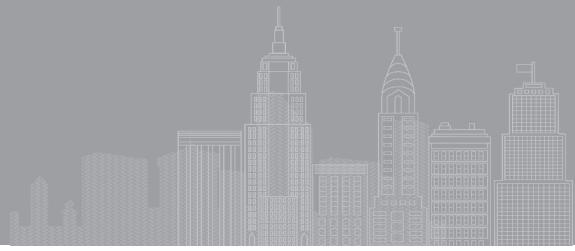
도시건축시민투어

부산 일대
(주최)부산광역시, (주관)부산국제건축문화제

2015. 3. 6

제4회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시상식 및 세미나
서울시청(신청사) 3층 대회의실
(주최)서울시

녹색건축도시 부문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 단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너지절감을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 및 검토 수수료의 범위, 감면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5(목) 공포했다.

또한, 효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여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줄였다.

이를 위해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검토업무의 접수, 보완요청, 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송달 시 발생되는 행정업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3.1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15.03.04.

환경부, '2015년 자연마당' 사업지로 광주 등 4곳 추가 선정

환경부 자연정책과

환경부가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생

태휴식공간 자연마당」 조성 확대를 위해 광주시 월산동, 청주시 대성동, 광양시 중동, 밀양시 내일동 등 4곳을 「2015년도 자연마당¹ 조성지」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선정지에 대한 기본설계 공모를 통해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까지 3년간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생태공간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2015.03.24.

울산시,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재검토 및 분석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울산시는 올해 4월부터 내년 9월까지 18개월간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공원녹지정책을 반영하는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²」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재정비」,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방안 마련」,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수립」 등을 주요내용 한다.

울산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어서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각종 하위계획의 기준

¹ 「자연마당」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8개 지역에 대해 조성완료 및 진행중이며, 이번 선정으로 12곳으로 확대

²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년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



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 확대 추진 시,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포함 모든 유형 건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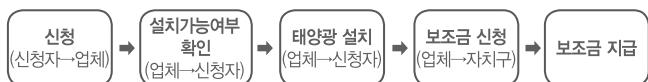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서울시는 옥상 없는 공동주택에서도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위해 설치용량과 공동설치 가구 수에 따라 32억원 규모로 올해 12월 11일까지 선착순 지원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중심이었던 시범사업(총 420kW, 1,777가구 보급)에서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건물로 확대하여 '18년 까지 10,000kW 규모로 『햇빛발전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14년 시범사업 시 설치 가구당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했던 방식을 발전용량(W)당 지원액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 용량에 따라 26만4천원(160W)에서 63만원(500W)까지 지원 범위 확대한다.

또한, 10가구(사무실)가 공동 신청하면 가구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하면 최대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니발전소 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 미니태양광 보급절차

2015.03.04.

충남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확대 추진

충청남도 에너지산업과

충청남도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국고보조금 지원 외 지방비 24억 원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충청남도는 그동안 주택지원사업(그린홈)에 도비와 시·군비 78억 898만 원을 투입해 태양광 3092개 가구, 태양열 866개 가구, 지열 415개 가구, 풍력 4개 가구 등 도내 4377개 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

올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마을단위지원) 등 도내 1200개 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생산설비 설치 시 비용의 40%정도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이외에 추가로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올해 10월 말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청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2015.03.05.

녹색건축도시 부문



울산시,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교통·방범·재난·소방 등의 상황실 및 관련시스템 연계통합
방안제시**

울산광역시 U시티정보담당관

울산시는 3월 4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품격있고 안전한 ICT 기반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을 위한 '울산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³를 개최했다.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 및 구·군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교통, 방범, 소방 등의 상황실과 CCTV 등 관련시스템 연계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산업단지 가스누출피해 대응시스템, 위험물차량 도심 진입 방지시스템, 스마트 재난안전 현장중계 시스템 등 시민생활 안전과 관련된 U-CITY 서비스 모델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03.04.

³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9월 24일까지 10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 방범, 재난, 소방 등의 상황실과 CCTV 등 관련시스템의 연계·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부,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을 위한 공모 착수

도시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30곳, 4월말까지 공모
후 6월경 확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는 3.23일(월)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 경제기반 상실 및 균린 생활환경 악화 지역을 대상으로 '16년도 도시 재생사업 지역선정을 위한 공모 착수했다.

금번 공모는 지역의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요에 부응하여 작년 대비 3배 확대된 최대 35곳으로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유형			
구분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일반형
특성	산단, 항만, 역세권 등 정비·개발 등을 통해 경제거점 조성	쇠퇴 중심상가지역 및 균린주거지역 재생	
선정개수	최대 5개	최대 10개	최대 20개
국비지원액	250억원 이내	100억원 이내	60억원 이내

금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60억 원~250억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도시재생특위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전국적인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세수 확충, 지역 일자리와 자생적인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3.22.

서울시,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 발표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서울시는 3월 9일(월)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확대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 27개 선도지역	
① 쇠퇴·낙후 산업지역	세운상가, G-밸리, 장안평 일대 3개소
② 역사·문화자원지역	세종대로, 마포석유비축기지, 노들섬 등 7개소
③ 저이용·개발 중심지역	서울역, 창동·상계, 영동MICE 등 5개소
④ 노후주거지역 전체	뉴타운 해제지역 및 지역특성관리지역 1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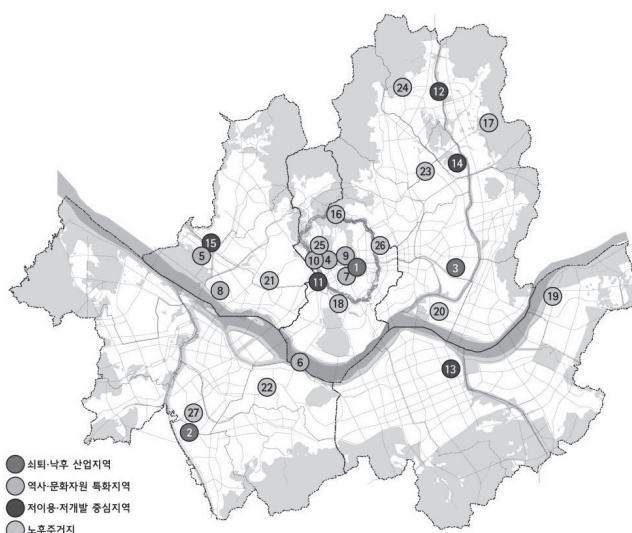
27개 선도 지역엔 민간투자 촉진, 통합적 계획수립,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이 '18년까지 우선 투자되며,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되어 그 공간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정비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선도사업을 위해 4년간 마중물사업 1조3천 억을 투자키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립 등을 통해 기반시설 등 필요한 사업 발굴 및 관련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투자기관인 SH공사를 재생사업 실행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공공(도시재생본부, SH공사)-민간(거주민, 건물주 등, 투자자)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육과 참여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쇠퇴·낙후 산업지역 3개소 624억원	1. 세운상가일대 도심산업 재활성화 2. 서남구 충공업 지역(G-Valley) 3.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재생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7개소 2,569억원	4.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5. 마포서유비축기지 친환경 복합공간 조성 6. 서울과 한강의 미래를 꿈꾸는 노들섬 조성 7. 남산 예술자락 재생사업 8. 달인리 문화창작빌딩 조성 9. 낙원시가·문화마을 주변 재생 10. 은평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건축도시재생방법률관 건립 등]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5개소 463억원	11. 서울역 역사권 주변 재생 12. 창동상계 일대 신경제중심지 조성 13. 고역스-감실운동장 일대 국교체유복합지구 조성 14. 광진대역 역사재민 주변 재생 15. 삼정DMC-4·8세 서북간 청조경계거점 육성

■ 대상지 위치도

2015.03.10.

울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공포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근거 마련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울산시는 '울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 참여하는 기구로서 10인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하도록 했다.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용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및 용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는 이 조례를 기초로 하여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울산시 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03.05.



인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계획 발표
쇠퇴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전체 원도심 지역 대상으로
11개월 동안 진행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책관실

인천광역시는 10개 군·구 전체의 인천 원도심 지역 약820 km²를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11개월 동안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도심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역별 맞춤형 재생전략 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등 실행주체 구성방안, 국비 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등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인천시는 항만, 노후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기반형과 쇠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균현재생형을 나눠 지정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실현 가능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군·구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주민참여형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2015.03.11.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법」의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에 의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보행로와 수목 배치에 대한 기준, 공동주택의 경우 창문과 수직배관의 설치, 승강장 내부 폐쇄회로 설치, 조경계획에 대한 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3.02.

경기도,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평택시, 시흥시 등 구도심 주택가와 골목길 대상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경기도는 3월부터 올해 말까지 도비 4억원을 지원하는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와 시흥시의 다세대주택, 원룸 밀집지역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Design)를 적용하며, 해당 지역별로 주민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환경특성 분석을 통해 기본설계를 마련하여 9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낡은 담장 개선, 골목길 조명 확충, CCTV 및 비상벨 설치, 휴게시설·소공원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자연적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주거환경으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설계단계부터 공사까지 전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도에서 추천한 셉테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사업의 완성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안양시와 고양시의 도시재개발 취소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안양시는 지난해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고양시는 3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2015.03.02.

부산시, 올해 첫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완공 부산시, 올해 첫 셉테드 사업 완공을 계기로 자치구·군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과

부산시는 범죄취약지인 부산진구 범천4동(일명 '미실마을')에 대한 올해 첫 셉테드 사업을 3월 4일 완료했다.

올해 첫 사업 완공지역인 미실마을은 미로형의 좁은 골목길, 방치된 공폐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화재발생시 막다

른 대피통로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주민의 불안요소를 고려하여△큰길로 안내하는 유도선 표시 및 대피로 신설△공폐가 차단시설 및 출입방지 시설 설치△주민공동이용을 위한 파고라, 빨래 건조대 설치△보안등, 반사경 및 소화기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부산시는 현재 범천동 외에도 문현동과 개금동에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맞춤형, 시민참여형 셉테드 사업의 완공이 잇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명확한 셉테드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셉테드 성공모델 조성과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계기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5.03.03.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I 권' 발간·배포

2016년까지 주제별 발간…미래세대 국토교육·해외홍보 활용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I 권(영토와 역사)』을 발간하여 20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새로운 국가지도집은 국토 공간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투영된 우리 국토의 모습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일목요연하게 표현하였고,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의 변화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지도제작 기법과 인포그래픽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했다.

또한, 이번에 동시에 발간된 영문판 국가지도집은 UN지명회의 등의 국제기구 전문가들에게 우리 영토와 지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의 잘못된 서술이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토와 역사를 서술한 국가지도집 1권은 총 4개 분야의 주제별로 구성했으며, '15년부터 개정되는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지리정보원은 '16년까지 제2권 국토의 인문환경과 제3권 국토의 자연환경을 국문판, 영문판으로 동시에 발간 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내외에 우리 국토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15.03.22.

국토부·산통부, '2015년도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선정' 공동 추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15년도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선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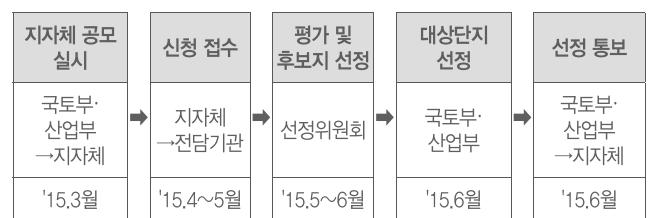
정부는 작년에 9개 노후 산단을 선정한 데에 이어, 금년에는 11개 단지를 선정하고, 내년에 5개 단지를 선정하여 '16년까지 총 25개 노후 산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 단지 선정 계획(안)				
구분	'14년(既 선정)	'15년	'16년	합계
공동단지 (재생+혁신)	2 (구미, 반월·시화)	6	1	9
재생단지	2 (춘천후평, 진주상평)	3	3	8
혁신단지	5 (창원, 대불, 여수, 부평·주안, 성서)	2	1	8
합계	9	11	5	25

경쟁력강화 대상단지로 선정되면, 유형에 따라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산단계획변경(기반시설비 50%, 주택도시기금 용자 등), 연구·혁신역량 확충(산단환경개선편드, 산학융합지구 등)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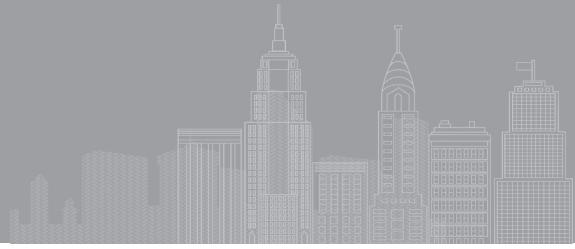
신청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시·도가 관할 지역 내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3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지자체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양 부처는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6월 까지(잠정)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5.03.19.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농식품부, '농촌형 적정주택 표준설계도' 26종 개발·보급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힌 농촌형 주택모델 개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및 '12, '10년도 표준설계도 보완을 완료함에 따라 '농촌주택 표준설계⁴' 도 26종을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총 26종으로 '14년 신규 8종, '12년, '10년 보완 각각 8종, 10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14년에 신규로 개발한 표준설계도 8종은 농촌지역 주거수요자의 변화를 반영하고 거주시 생활방식을 고려한 '농촌형 적정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경제성과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둔 보급형과 건축재료, 구조, 설비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고급형 두 유형으로 계획하였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서 상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본사, 지역본부, 지사)를 통해서도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만나볼 수 있다. 특별히 올해에는 국토교통부와의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http://eais.go.kr))를 개편하여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한 신고, 인·허가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2015.03.03.

⁴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 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변화된 농촌 주거생활을 반영한 다양한 농촌주택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함으로써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주택의 품격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격년으로 보급하고 있는 농촌주택 종합안내서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14년 11월 건축법 개정에 의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3월 12일(목) 11시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시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게 될 것 이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2015.03.11.

대구시, 2015년도 5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올해 5개 지구 732필지 340.4천m²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대구시는 지적재조사사업⁵을 통해 도면경계와 현실경계가 일

⁵ 지적재조사 사업 : 100여 년 전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토지이용의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



치하지 않는 5개 지정 불부합지구에 대하여 2012년부터 올해 까지 총 578필지, 129.7천m²의 지적경계를 디지털(좌표) 지적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없애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5.03.20.

세종시,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27일 신정2리 이어 28일 다방2리 마을회관서 설명회

세종특별자치시 민원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27일부터 신정리와 다방리 지역 251필지 50만 2,627m²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된 일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계설정 기준에 대한 설명과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기준 결정을 위해 설명회를 마련, 이 자리에서 토지소유자협의회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신정리 지역은 공시지가로, 다방리 지역은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이의 신청 등을 거쳐 두 지역에 대한 토지경계 확정과 조정금 산정 등, 올 연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5.03.04.

충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충청북도 공보관

충청북도는 올해 도내 전 시·군 5,344필지(8,003천m²)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금까지 10만 필지를 변환했고 올해는 17만 필지를 추진하는 등 2020년까지 불부합지를 제외한 충북도의 모든 필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계획이다.

2015.03.04.

울산시,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12월 완료 … 도시이미지 향상 위한 기준틀 마련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울산시는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도시창조과에서 직접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하며, 3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장조사, 타지자체 가이드라인 분석, 가설울타리 관리부서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대형건축공사장, 공공발주공사 현장 등에 설치된 가설울타리, 가림막 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기본원칙 및 방향설정', '디자인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제시', '적용절차 및 체크리스트 작성' 등이다.

울산시는 라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가설울타리가 공사장의 안전을 지키고, 면지와 소음을 막는 기능에 더해 거리의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미관을 살리며 울산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으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한다.

2015.03.19.

부산시,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강제철거' 아닌 '공동체' 중심의 구도심 활성화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부산시는 지난 2011년 12월 수립한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이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내년 5월까지 새로운 정책기조와 도시비전, 국정과제 수용, 노후된 기존 도심재생,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방재기능 강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고 밝혔다.

재수립 용역은 8억의 예산으로 부산시 전 행정구역, 항만 구역, 어항구역 등 993.54km²에 대하여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부산시는 '부산시민이 부산의 미래를 만든다'는 취지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130여명의 '시민계획단' 및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을 통해 시행단계의 실행력 제고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완료되면 후속조치로 권역별 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2015.03.18.

대구시,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추진 무침회 골목·경상감영길 등 명품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

대구시는 올해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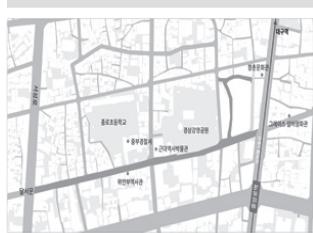
이번에 시행하는 2곳의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한전지중화 등 총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공모를 통해 디자인(안)을 만들어 2016년 3월까지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6월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으로 거리의 가로경관 증진은 물론, 관광자원화를 통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 무침회 골목



중구 경상감영길





■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2015.03.16.

부산시, 2015년 노후간판 교체 사업 실시 시내 곳곳에 산재한 도시미관 저해 간판 1,000개 교체(간판 당 100만 원, 업소당 200만 원 지원, 4월 30일 까지 접수)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경관과

부산시는 도시 이미지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시내 곳곳에 산재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노후간판 정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노후간판 1000개 교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노후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5,832개 간판 교체 신청을 받아 노후·미관저해 간판 2,995개를 교체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노후간판 교체 사업은 △가로(가로폭), 세로(창문사이 벽면 폭) 초과 등 불법간판 및 미관저해 대형 간판 △원색사용, 미풍양속 저해 간판 △도시미관을 해치는 저품격 간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4월 30일까지 구·군 자체조사 및 시민들로부터 교체대상 간

판접수를 받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교체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당 간판 제작비의 90%(간판 당 100만원, 업소 당 200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5.03.1.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 및 신축비용 응자지원 범위 확대 기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시 전역 확대해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 유도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가 낡고 불량한 저층주거지(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를 개량·신축할 때 공사비를 최대 9천만 원까지 연 2% 저리로 응자 지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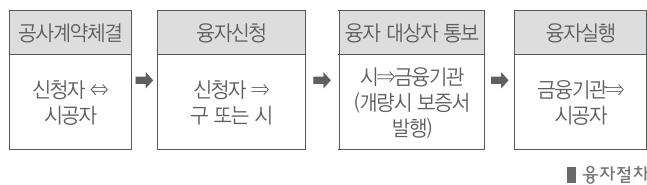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관리 방식의 하나로, '12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에 한해 1.5~2.0%의 장기 저리로 응자를 지원해왔으며, 응자지원 혜택을 받는 지역의 범위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서 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응자 이자지원
(단위:백만원)

구 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융자한도	45	20 (최대 4가구)	20 (세대당)	90	40 (최대 4가구)					
융자조건	신용			담보						
지원시기	준공 시 100%			착공 시 50%, 준공 시 50%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응지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로 동결										
– 응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 시공자에게 지급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특히, 개량 공사의 경우 증축 같이 인허가 대상이 되는 큰 공사뿐만 아니라 단열·방수 공사 등 소규모 개량까지 용자를 지원하는 만큼,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장수명 주택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03.04.

울산시, 2015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지속 구축

1962년 ~ 2014년 총 4850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도시계획 도면과 고시문 등 안방에서 열람 기반 마련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울산시는 1962년 최초 도시계획 고시 이후 2014년 말까지 4,850건에 달하는 도시계획관련 고시분에 대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5년 추가로 고시될 내용(200~300건 정도)은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할 예정이다.

전산자료로 구축된 도면과 고시문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사이트(www.upis.go.kr)를 통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향후 전국에서 UPIS사업이 완료되고, 도시계획자료를 UPIS로 관리해 나간다면 도시계획 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03.23

인천시,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공모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
4.1~5.29. 접수

인천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는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 기존의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을 4월1일~5월29일까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규모는 토지면적 1만m² 이상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지정(녹지지역 10% 이내 포함 가능)해야 하고,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 및 관광 특구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2013.03.30

전남도, 행자부 평가 '2014년 옥외광고업무 추진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

전라남도가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2014년 옥외광고업무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2개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고물실명제 전산화시스템 구축과,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 등 옥외광고물 문화 개선사업과, 광고물 표준디자인을 개발·보급사업을 펼쳤다. 지난해 5월에는 간판디자인 학교를 운영하고, 11월 제13회 전라남도 옥외광고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특히 경관 개선과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3회)을 실시하고, '범 도민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을 400명에서 740명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2015.03.06.

**전북도, 「주택·경관분야」 국비 39억 원 확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34억, 간판개선시범사업 4억, 국토환경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0.8억**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전라북도는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2015년 주택·경관분야 중앙(공모)사업에 국비 약 39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15년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과 간판개선 시범사업 및 국토환경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으로 사업별 내용을 보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공임대주택(영구, 50년) 13개단지에 34억원을 투자하여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경관분야에서는 간판개선 시범사업⁶(4억원) 및 국토환경 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사업⁷(8천만원)이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화롭고 개성 있는 경관 창출과 지역의 디자인 관리체계 강화는 물론, 지역브랜드의 가치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03.12.

⁶ 간판개선 시범사업 : 남원, 진안 2개소, 210개 업소의 간판 370개

⁷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 익산, 임실 2개소, 지역총괄계획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전북도, '2015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본격 추진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2년간 7.4억원 지원
익산시, 고창군 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전라북도는 도시 및 농촌지역 경관디자인 개선과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2015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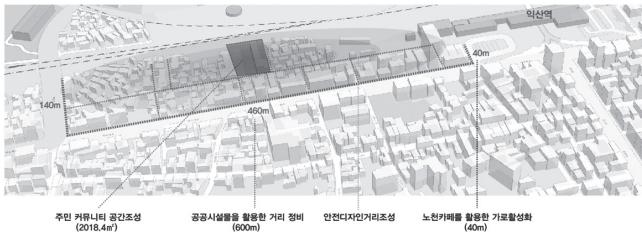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익산시 'KTX역사 주변 가로환경 안전 디자인 조성사업' 등 8개 신청 사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7명의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5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대상 사업을 최종 확정하였다.

■ '15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공모선정

구분	지자체명	사업명
시부	익산시	KTX역사주변 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군부	고창군	운곡습지 원평천 생태관광 경관조성사업

「2015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은 지자체 경관디자인 인식 확산과 경관 향상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2개 사업은 선도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와 사업이후지역의 선도적 경관개선 효과 등이 고려되어 선정 되었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경관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를 2년간 3억 7천만 원씩의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 KTX역사주변 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2015.03.27.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